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172～197.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172

북한의 '두 국가론'과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함의*

이 지 영**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이나 통일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국가정체성과 타자화(othering) 논의를 활용하여, 북한이 남한을 동일 민족이나 통일 대상이 아닌 '항구적 타자'로 재규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자신의 국가적 자기(Self)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또한 탈북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가 생산하는 공식적 정체성과 주민 수준의 인식 및 수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민족·통일정체성과 국가 및 체제에 대한 강한 정치적 충성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두 국가론'은 이러한 정체성 구조의 중심을 민족과 통일에서 국가·주권·영토·안보로 재조정하려는 변화로 인식되고 있었다. 탈북민들은 북한이 '민족 중심 국가'에서 '국가 중심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우리 민족'보다 '우리 국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남정책의 전환을 넘어 국가 중심 정체성의 강화, 체제정당성의 재구성, 정치사회화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기보다 제도화와 정치사회화,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어: 적대적 두 국가론, 국가정체성, 타자화, 체제정당성, 북한이탈주민

---

* 이 논문은 2026년 7월 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학술대회(남북관계 인식의 전환과 통일교육의 재구성)에서 발표한 논문 "북한의 '두 국가론'과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함의"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이지영/서울사이버대학교 통일안보북한학과 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Tel: 02-944-5198/E-mail: young710@iscu.ac.kr

Ⅰ. 서론

1. 문제 제기

2020년대 들어 북한은 남북관계를 서로 독립된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이를 점차 강화해 왔으며, 2026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을 몇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박형중, 2026; 조성렬, 2026). 먼저,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확대되고 한국의 우위가 구조화되면서 기존의 ‘민족통일’ 서사가 북한의 체제 유지와 국가전략에 유리하게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남북 및 북미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과 안보환경의 변화를 모색했던 대남·대미 관여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남전략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핵능력의 고도화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무력을 체제안전의 핵심적 수단으로 확보함으로써 통일을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전략으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국가로 존속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핵무력을 기반으로 남북한이 장기적으로 적대적 관계 속에서 병존하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전략적 접근에 해당한다. 즉 남북한의 국력 격차, 대남·대미 관여정책의 한계, 핵능력의 고도화와 같은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북한이 어떠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존 통일노선을 수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배경 자체보다 ‘두 국가론의 선택이 북한의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이나 국가전략의 변화로 한정하기보다, 그러한 전략적 선택이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특히 많은 연구가 ‘두 국가론’의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하는 핵능력의 확보는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생존전략과 정체성 변화라는 보다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핵무력을 체제생존의 핵심적 수단으로 확보하면서 북한은 통일을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전략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이는 하나의 민족과 통일을 전제로 해왔던 기존 민족공동체 서사의 전략적 효용 약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조건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민족 중심 정체성에서 독립된 국가 중심 정체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핵능력의 확보와 ‘두 국가론’,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은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핵무력이 국가전략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변화된 국가전략이 다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 서사(敍事)의 전략적 기능 약화를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이 ‘하나의 민족을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가 남북한의 역량 격차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통일담론의 효용이 감소한 결과라면,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북한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기준이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통일담론이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정체성을 뒷받침하였다면, ‘두 국가론’은 남북한을 서로 구별되는 국가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통일 서사의 전략적 효용 약화와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동일한 변화가 전략과 정체성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남·대미 관여정책의 실패 역시 '두 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전략적 배경이지만,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이를 '관여를 통한 정체성'에서 '적대를 통한 정체성'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관여정책이 남북 및 북미 간 협상과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전과 대외환경의 변화를 모색하였다면, 이러한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협력과 통일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적대와 대립을 전제로 한 관계로 재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은 더 이상 통일과 협력의 상대방이 아니라 북한이 자신의 국가적 경계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항구적인 타자(permanent Other)'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가정체성이 외부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재생산된다고 보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타자의 구성(othering)'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을 적대적인 타자로 재규정함으로써 남한과 구별되는 독립된 국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남전략의 변화인 동시에 타자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분석해 온 대남정책 및 대외·외교전략의 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두 국가론'의 채택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를 어떠한 국가로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특정한 대남정책이나 외교전략의 변화로 한정하기보다, 북한이 기존의 민족과 통일을 중심으로 구성해 온 자기인식을 재조정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자기정의(self-definition)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관련 연구가 빠르게 축적되었다. 초기 연구가 주로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과 대남·통일정책의 변화에 집중하였다면, 이후 연구는 체제생존과 전략적 선택, 국제환경의 변화, 법·제도적 재편, 국가주의와 국가정체성 등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해 왔다.

첫째, 두 국가론을 대남·통일정책의 근본적 전환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중구(2024)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과거의 '사실상의 두 국가론'과 구별하면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영역에서 대결의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정책변화로 파악하였다. 권숙도(2024) 역시 이를 민족과 통일을 전제로 했던 기존 대남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평가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기존 남북관계의 규범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둘째, 체제생존과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두 국가론의 등장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고유환(2025)은 이를 정전체제, 수령체제의 유지와 계승, 대미 관계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김창환(2025)은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김정은 지도부가 남한의 문화와 정보 유입, 시장화와 개혁·개방 등을 체제유지에 대한 잠재적 손실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론이 선택되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 강경정책이 아니라 체제안보와 장기적인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주

목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강혜석(2024)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좌절과 남북관계의 악화,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두 국가론의 등장과 연결한다. 김연철(2026)은 이를 김정은 체제의 정상국가화, 남북관계의 구조적 악화, 북한의 지정학적 재인식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국가론을 북한 내부의 정책변화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변화된 국제환경과 한반도 질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법·제도와 남북관계 질서의 재편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정대진(2024)은 두 국가론으로 인해 기존의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전제가 변화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통일방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효원(2026)은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헌법이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질서와 규범으로 전환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두 국가론의 제도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는 두 국가론이 지도부의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법·제도 및 국가질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국가주의와 국가정체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정수희·민경태(2025)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두 국가론을 연결하여 북한의 정치담론이 민족공동체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정체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 법제를 통해 '민족'의 상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우리 국가', '강국', '자력' 등의 국가주의적 기호가 강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임수진(2026)은 두 국가론을 김정은 정권의 '집단적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 전략'으로 파악하면서, 남한의 타자화를 통해 '우리'와 '적'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독자적인 국가정체성과 체제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국가론 연구를 대남·통일정책에서 국가정체성과 체제정당성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두 국가론'의 등장 배경과 전략적 목적, 대남·통일정책의 변화, 국제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주의와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과 연결하는 것 자체를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 연구는 주로 북한의 공식담론, 관영매체, 문화예술 및 법·제도를 통해 국가가 어떠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변화만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체제정당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특히 민족 중심의 정체성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와 공민을 우선하는 정체성으로의 이동, '우리 민족'에서 '우리 국가'로의 담론적 중심축 변화, 그리고 남한을 동일민족에서 적대적 타자로 재규정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나아가 공식담론과 법·제도 수준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국가 중심 정체성 재구성의 사회적 기반과 주민 수준의 인식구조를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외부환경과 체제역량의 변화 → 전략적 적응으로서의 두 국가론 → 국가정체성 재구성 → 담론·법제·정책 변화 → 주민 정체성 → 체제정당성'의 연계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3.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국가이념과 통일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은 1948년

건국 이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일'이라는 기본 논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통일이라는 규범적 전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남정책 조정을 넘어 북한의 국가이념과 헌법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이나 대남전략의 변화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국가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셋째,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두 국가론'의 전개 과정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관계, 헌법과 영토에 대한 인식, 주민의 정체성(identity), 체제정당성, 그리고 통치전략(governance) 등 북한 국가를 구성하는 보다 광범위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남정책의 변화라는 단일한 차원을 넘어, 북한이 남한이라는 '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동시에 주민의 정체성과 체제정당성까지 재구성하려는, 이른바 '국가를 새롭게 정의하는 정치'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연구 프레임과 연구 방법

1) 연구 프레임(research frame)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외부환경과 전략의 변화가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제도와 주민 정체성 및 체제정당성의 변화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프레임은 두 가지 상호 연계된 차원으로 구조화한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제환경 및 남북한 역량관계의 변화 → 북한의 전략적 적응으로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선택 →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 대남정책·통일관·헌법·정치담론의 변화 → 북한 체제의 장기적 정당성 확보라는 구조를 설정한다.

둘째,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 북한 지도부의 위기의식 →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 공식담론의 변화 → 헌법·법률의 개정 → 주민 정체성의 재구성 → 체제정당성의 강화라는 분석 구조를 설정한다. 이 두 가지 연구 프레임은 각각 북한의 대외적·전략적 적응과 대내적·정치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면서 상호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개별적인 대남정책의 변화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의 변화'가 '정체성의 변화'로, 다시 제도와 주민 정체성 및 체제정당성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구성주의적 정체성 연구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정체성 및 타자화(othering)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며, 특히 David Campbell과 Iver B. Neumann의 연구에 주목한다.

Campbell의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1998)는 국가정체성이 고정되거나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험과 타자를 구성하는 정치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외부의 위협과 '타자(Other)'를 구성하는 동시에 그와 구별되는 '자기(Self)'를 형성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역시 이러한 정체성 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한편, Neumann의 *Uses of the Other: "The East" in European Identity Formation*(1999)은 정체성 형성에서 타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면서, 유럽이 동유럽·러시아·'동방'을 타자로 구성하고 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유럽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Neumann, 1999).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핵무력의 확보 → '적대적 두 국가론'의 채택 → 남한에 대한 항구적 타자화 → 북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 체제정당성의 강화라는 분석적 연결구조를 설정한다. 즉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동일한 민족이나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로 재규정하는 것은 남한이라는 타자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 타자와 구별되는 북한 자신의 국가적 자기(Self)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북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구성주의적 국가정체성과 타자화의 논의를 '적대적 두 국가론'에 접목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국가정체성의 재구성과 체제정당성의 변화로 연결되는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탈북민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 탈북민 대상 실태조사는 문헌분석을 보완하는 단순한 보조자료가 아니라,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을 주민의 인식과 경험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험적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민의 정체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북한 내부 주민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경험한 탈북민은 북한 사회의 정체성 변화와 그 수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적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가 생산하는 공식적 정체성(official identity)과 주민이 실제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헌법과 당 규약, 김정은의 연설,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의 담론은 북한 국가가 어떠한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국가가 새로운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식문헌과 담론을 통해 '국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탈북민 실태조사는 주민들이 국가·민족·통일에 관한 공식담론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공식적 국가담론과 주민 인식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적 장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북민은 북한 국가정체성 변화의 '경험적 증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경험하였으며, 일부는 북한 사회에서 국가·민족·통일에 관한 정치담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다. 따라서 공식문헌이 북한 국가가 어떠한 정체성을 생산하고 제시하는지를 보여준다면, 탈북민 조사는 그러한 국가담론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정체성의 '생산(production)'과 '수용(reception)'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공식담론과 정치엘리트 중심의 분석을 넘어 국가가 생산한 정체성이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거나 저항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남한 주민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국가와 민족 및 통일에 관한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두 국가론'이 북한 주민의 민족인식·국가인식·통일관 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공식적인 국가담론의 변화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민의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Ⅱ. 북한의 '두 국가론'의 경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특정 시점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통일담론에 대한 문제의식의 형성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대남관계의 공식화, 국가노선으로의 발전, 관련 제도와 조직의 개편, 헌법적 제도화, 그리고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강혜석, 2024; 이중구, 2024; 정영철, 202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경과를 크게 문제의식의 형성, '적대적 두 국가관계'의 공식 제기, 국가노선으로의 발전, 제도·조직의 재편, 헌법적 제도화,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제의식의 형성 단계로서 20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북한은 기존의 통일담론과 남북관계에 대해 이전보다 비판적인 태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흡수통일 노선'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상시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심화를 비판하고 2022년 핵무력 법제화 이후 형성된 새로운 안보전략의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기에는 아직 '두 국가론' 또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점차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이후 본격화되는 대남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의 공식 제기 단계이다. 2023년 1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니며 통일은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가운데 기존 통일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남기구의 정비를 요구하였다(김정은, 2023). 특히 이 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관계로 이해했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세 번째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국가노선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앞서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김정은, 2024).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더 이상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한편, 남북한을 서로 다른 국가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과 평화통일 개념의 폐기, 이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2023년 말 제기된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대남정책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넘어 북한의 국가정책을 구성하는 원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제도 개편과 조직 정비의 단계이다. 북한은 2024년부터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에 부합하도록 기존 대남기구와 관련 조직을 실제로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대남기구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민족경제협력 및 통일 전선과 관련된 조직들을 정비하는 한편, 관련 선전 체계에도 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대남기구와 통일 관련 조직들이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전제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였다면, 이들 조직의 폐지 또는 기능 조정은 기존의 통일지향적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부합하는 제도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헌법적 제도화의 단계이다. 김정은은 2024년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규정, 통일 관련 표현의 수정, 영토 개념의 재정립 및 남북 국가관계의 재규정 등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정책적·담론적 차원을 넘어 북한의 헌법질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을 통해 한층 구체화되었다(김규범, 2026). 이 헌법 개정은 통일 관련 조항(서문과 9조의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삭제와 영토 조항(북한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북측 영역)의 신설, 핵무력 지휘체계의 재정비(개정헌법 89조는 핵무력 지휘권이 국무위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두 국가론’을 헌법적 차원에서 확약하였다(김정은, 2026).

여섯 번째는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단계이다. 2024년 이후 북한의 공식매체와 정치담론에서는 ‘조국통일’,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 등 기존의 민족·통일 중심 표현이 약화되거나 삭제되는 반면, ‘공화국’, ‘국가주권’, ‘국경’, ‘영토’, ‘국가안전’, ‘핵억제력’과 같이 독립된 국가의 주권성과 안전을 강조하는 담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국가론’이 대남정책의 조정이나 제도개편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를 어떠한 국가로 규정하는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존의 민족과 통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자기인식에서 독립된 국가의 주권·영토·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인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 ‘두 국가론’, ‘국가정체성 재구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의 개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대남정책의 원칙을 의미한다면, ‘두 국가론’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관계에 대한 인식과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프레임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국가정체성 재구성’은 이러한 정책적·전략적 변화가 북한의 국가적 자기인식과 주민의 정체성, 나아가 체제정당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개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변화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전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대남정책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국가전략의 변화,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그리고 새로운 체제정당성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원이 중첩된 복합적인 정책·정치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보다 부합한다.

Ⅲ. 두 국가론의 다양한 차원들

1. 대남 정책의 전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갖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대남정책의 구조적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동일한 민족에 기초한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의 국가안보와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적대국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

다(권숙도, 2024). 이에 따라 기존 대남정책의 중요한 기반이었던 민족공조 노선과 통일전선전술은 사실상 폐기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결과 같은 민족 중심의 담론 역시 정책적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동시에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국가 사이의 적대적 관계로 재규정되었으며(정대진, 2024), 대남전략에서도 대화와 교류·협력보다는 군사적 억지와 핵무력을 통한 체제안전의 확보가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대남정책의 조정이라기보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전제를 ‘민족 내부의 관계’에서 ‘국가 간 적대관계’로 전환한 대남전략의 구조적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가전략의 전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규정할 것인가라는 대남정책의 차원을 넘어, 북한 국가의 장기적인 생존전략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전략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국가전략이 민족통일과 체제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을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해 왔다면, ‘두 국가론’ 이후에는 통일보다는 체제생존과 국가안전을 우선시하고 핵무력을 그 핵심적인 보장수단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핵보유국으로서의 국가적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한의 장기적 병존과 분단을 사실상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전략적 질서를 형성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며, 경제운영 역시 장기적인 국제제재와 대외적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은 더 이상 통일을 통해 하나의 민족국가를 완성하는 ‘통일국가’의 지향보다는 핵무력을 기반으로 체제와 국가의 독립적 존속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려는 ‘항구적인 핵보유 국가’의 지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남전략의 변화인 동시에, 통일·민족·체제경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국가생존전략을 핵무력·국가주권·체제생존·장기적 국가병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국가전략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국가 정체성의 재구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본 연구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이다. 과거 북한의 국가정체성이 하나의 조선민족과 통일을 전제로 하면서 스스로를 ‘조선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로 규정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남한과 구별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자신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구갑우, 2024). 이는 북한의 국가적 자기인식을 구성해 온 중심축이 민족과 통일에서 국가와 주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전제로 한 기존의 민족 중심적 정체성에서 북한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중심적 정체성으로의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정수희, 민경태, 2025). 이러한 변화와 함께 ‘민족’, ‘조국통일’, ‘삼천리강토’, ‘우리민족끼리’ 등 기존의 민족·통일 중심 담론은 약화되거나 폐기되는 반면, ‘국가’, ‘영토’, ‘국경’, ‘주권’, ‘핵국가’와 같이 독립된 주권국가의 경계와 국가성을 강조하는 담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떠한 국가인가’라는 국가적 자기정의(self-definition)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Campbell, 1998; Neumann, 1999), 즉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두 국가론’을 기존의 민족·통일 중심 정체성으로부터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북한 국가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 체제정당성의 재구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체제정당성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에서 통일은 오랫동안 단순한 대남정책의 목표를 넘어 북한 체제의 역사적 사명과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통일을 더 이상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남한을 별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하게 된다면, 기존의 통일과 민족해방, 사회주의 혁명에 기초한 체제정당성 역시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의 통일 중심 정당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으로 핵보유국의 지위, 강국건설, 반미와 대외적 위협에 대한 대응, 국가안보와 체제수호, 김정은의 영도, 그리고 국가의 생존과 발전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중구, 2026; 이효원, 2026). 이는 체제정당성의 중심이 ‘통일과 혁명의 역사적 사명’에서 ‘국가와 체제의 생존 및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정책과 국가정체성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와 통치를 정당화할 것인가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5. 국제전략의 변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남정책과 국가전략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가적 지위와 대외관계를 설정하는 국제전략의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유환, 2025). 과거 북한은 한반도를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가 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공간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대외정책 역시 이러한 통일담론과 일정하게 결합하여 설명해 왔다. 그러나 남북한을 서로 독립된 두 국가로 규정하게 되면 북한은 통일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독립된 주권국가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 요구, 남북관계와 분리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대미협상, 북미관계 정상화 및 수교의 추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그리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외교적 연계 강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국가론’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미래의 ‘통일국가’를 구성하는 일방의 주체로 규정하기보다, 현재의 영토·주권·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독립된 ‘정상국가’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국제전략 변화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대남관계의 재설정만이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국가정체성과 대외적 지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대내 정치 · 사회 통합 전략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남정책과 국가정체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통합을 어떠한 논리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민족과 통일을 체제의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제시하면서 주민들에게 통일이라는 집단적 목표와 ‘미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통일담론이 약화되거나 국가적 목표에서 사실상 배제될 경우, 기존의 민족·통일 중심 담론을 대체하여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체제에 대한 충성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논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안보와 체제수호, 핵억제력과 핵보유국의 지위, 반미·대외위협 담론, 애국주의와 국가주의,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국가적 성취와 영도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사회적 통합 담론을 구성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유영식, 2019).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집단적 소속과 충성의 대상을 '민족'과 '통일'에서 '국가'와 '체제'로 이동시키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의 정치사회적 통합 원리에서도 민족주의보다 국가주의(state nationalism)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외적 국가관계의 재설정인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적 소속감과 정치적 충성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정체성과 사회통합의 원리를 재구성하려는 대내적 통치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7. 본 연구에서의 분석 차원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나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조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고, 북한 국가의 전략·정체성·정당성·제도질서를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국가 재편'의 과정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적대국가로 전환하는 대남정책의 변화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통일보다는 체제생존과 핵무력을 중시하는 국가전략의 전환, 민족과 통일 중심의 자기인식에서 독립된 주권국가 중심의 국가정체성 재구성, 통일과 혁명의 역사적 사명에서 국가생존과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정당성의 재구성,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헌법·법률·조직·정치담론의 제도적 재편으로 확장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국제적 지위와 대외전략, 주민의 정치적 소속감과 사회통합의 원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체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대남정책 → 국가전략 → 국가정체성 → 체제정당성 → 제도질서와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변화가 상호 연계되는 국가 재편의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적 관점은 본 연구의 주제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국가 정체성 재구성의 정치적 함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기존의 대남정책 또는 대외전략 중심의 분석을 넘어 '두 국가론'을 계기로 북한이 스스로를 어떠한 국가로 재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국가의 전략과 정당성 및 제도적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 틀을 제공한다.

Ⅳ. 실태조사를 통한 북한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경험적 분석

1. 실태조사 연구 목적과 분석 관점

앞 장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전략의 전환과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새로운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제도화한다고 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내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공식담론과 제도를 통해 생산하는 공식적 정체성(official identity)과 주민들이 정치사회화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정체성을 생산하고 제시하는가와 함께,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거나 거부되는가라는 '수용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정치체제에서는 헌법과 법률, 김정은의 연설, 당 문헌과 공식매체 등을 통해 국가가 생산하는 공식담론과 정체성의 방향은 비교적 확인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를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하며 수용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국가정체성 재구성이 공식적인 국가담론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주민의 민족인식·국가인식·통일인식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탈북민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기존의 민족 중심적 통일담론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 최근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변화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앞 장의 이론적·정책적 분석이 국가에 의한 '정체성의 생산(production)'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장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주민 수준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수용(reception)'을 탈북민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공식담론과 국가전략의 변화에 그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주민 수준의 정체성 변화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 장에서 제시한 국가정체성 재구성 논의의 경험적 설명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탈주민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북한에서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고 정치·사회적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95명(44.4%), 60대 이상 75명(35.0%), 40대 32명(15.0%), 30대 12명(5.6%)이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함경도 100명(46.7%), 양강도 65명(30.4%), 자강도·강원도 17명(7.9%), 평양 15명(7.0%), 평안도 9명(4.2%), 황해도 8명(3.7%)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9.4%가 50대 이상,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이 77.1%를 차지하여 북한 체제와 사회를 비교적 장기간 경험한 응답자들이 조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1> 실태조사 참여자 기본정보

[성별, 연령, 출신지역]

총 응답자	성별	연령	출신지역
214명	여성: 165명 남성: 49명	30대: 12명 40대: 32명 50대: 95명 60대 이상: 75명	함경도: 100명 양강도: 65명 자강도/강원도: 17명 평양: 15명 평안도: 9명 황해도: 8명

[탈북 시기]

탈북 시기	인원	비율
2000년 이전	23명	10.7%
2001~2010년	**124명**	**57.9%**
2011~2015년	37명	17.3%
2016~2020년	25명	11.7%
2021년 이후	5명	2.3%
합계	**214명**	**100.0%**

조사대상자의 탈북 시기별 분포를 보편 대부분 2023년 말 이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주민들이 아니다. 본 실태조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북한 사회와 기존 통일·민족·국가정체성 담론을 경험한 탈북민들이 최근의 정책전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본 조사는 탈북민의 과거 경험과 기억,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의 현재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탈북 시기와 연령,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탈북민 조사는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주민 인식을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북민은 북한 국가정체성 변화의 '경험적 증인'이자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민의 경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 자료의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는 대표성과 일반화의 한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공식문헌과 담론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정체성의 주민 수준 인식과 수용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3. 실태조사 분석

1) 민족 중심 정체성의 형성과 내면화

앞 장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존의 민족 중심적 국가정체성에서 국가 중심적 국가정체성으로 이동하는 재구성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체성의 전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기존의 민족정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민족공동체와 통일담론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두 국가론'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정체성의 내용과 강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인식하였는지, 조국통일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민족·통일담론을 개인적 정체성의 일부로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북한 사회에서 민족 중심의 통일담론이 상당한 수준으로 정치사회화되고 내면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84.1%는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 남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86.9%는 조국통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83.7%는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78.5%는 자신 역시 이러한 한민족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관련 문항에서 일관되게 80% 안팎의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의 민족'과 '조국통일'이라는 담론이 공식적인 정치적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의 민족인식과 통일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기제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 민족정체성 인식(문항 6-10)

문항	매우 동의	동의	동의율 합계
남한주민은 같은 민족이라고 배웠다.	54.7%	29.4%	84.1%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58.9%	28.0%	86.9%
북한 주민들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53.3%	30.4%	83.7%
국가보다 민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교육받았다.	45.3%	22.0%	67.3%
남북은 정치체제가 달라도 결국 하나의 민족공동체라고 생각하였다.	50.5%	28.0%	78.5%

이러한 결과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담론이 단순한 대남정책의 수사나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치사회화 과정으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민족으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부여해 왔으며, 이러한 담론은 동시에 북한 체제의 역사적 사명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북한의 기존 국가정체성과 체제정당성이 상당 부분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하나의 통일'이라는 서사(敍事)와 결합하여 구성되어 왔다는 본 연구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국가보다 민족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교육받았다'(문항 9)의 동의율이 67.3%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민족정체성이 단순히 국가주의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강한 민족정체성과 강한 국가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층적 정체성 구조'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두 국가론'은 약한 민족정체성을 국가정체성으로 쉽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강하게 내면화된 민족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 국가 중심 정체성을 재구성해야 하는 훨씬 복잡한 프로젝트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민족정체성이 국가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였다기보다 국가와 민족이 상호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민족주의는 국가를 초월하여 민족 자체를 최우선적 가치로 설정하는 순수한 민족주의라기보다, 민족과 통일이라는 담론을 국가와 체제의 정당성에 결합시키는 국가화된 민족주의 또는 국가에 의해 조직된 민족담론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Campbell의 국가정체성 논의와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Campbell의 관점에서 국가정체성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산하는 정치적·안보적 담론과 경계설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된다(Campbell, 1998). 북한 역시 '하나의 민족'과 '조국통일'이라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주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지만, 이러한 민족담론은 궁극적으로 북한 국가와 체제의 역사적 사명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두 국가론'은 기존의 민족정체성을 아무런 기반 없이 갑작스럽게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 기존에 국가와 체제의 정당성에 결합되어 있던 민족·통일담론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 자리를 국가·주권·영토·안보 중심의 담론으로 대체하면서 국가 중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따라서 '두 국가론'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은 '민족정체성의 완전한 소멸'이라기보다 민족과 국가 사이의 위계와 결합방식이 변화하고, 그 중심축이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국가 중심 정체성의 구조와 국가주의의 잠재성

북한이 오랫동안 민족공동체와 조국통일을 강조해 왔다면, 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충성과 소속의 대상이 민족과 국가 가운데 어디에 더 강하게 귀속되어 있었는가이다. 앞서 살펴본 조사 결과가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정체성과 통일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면,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이보다 더욱 높고 일관된 응답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97.2%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을 우선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인식하도록 교육받았다고 답하였으며, 92.1%는 국가이익이 민족보다 우선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가 통일보다 중요하였다'라는 문항에는 89.2%가 동의하였으

며, '남한보다 북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시되었다'는 문항에서도 96.2%가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요구된 실질적인 정치적 소속과 충성의 중심은 북한이라는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에 보다 강하게 위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3> 국가 중심 정체성(문항 11-15)

문항	매우 동의	동의	동의율 합계
자신을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인식	65.4%	31.8%	97.2%
민족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교육	60.3%	31.8%	92.1%
사회주의 체제 수호가 민족통일보다 중요	55.6%	33.6%	89.2%
남한보다 북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	64.0%	32.2%	96.2%
북한에서 국가 중심 정체성이 점차 강화	55.1%	35.5%	90.6%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사회에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반드시 상호 경쟁하거나 배타적인 관계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하나의 민족'과 '조국통일'이라는 담론은 북한이라는 국가와 체제의 역사적 사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며, 민족적 소속감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정치적 충성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민족주의는 국가와 분리된 독립적인 민족주의라기보다 국가와 체제의 목표에 결합된 형태로 작동하였으며, 실제 정치적 충성의 중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와 수령 중심의 정치체제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기존 정체성 구조는 '민족정체성 대 국가정체성'이라는 이분법적 관계보다는 민족정체성을 포괄하면서도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우위에 두는 중층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주의를 갑작스럽게 창출하는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북한 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국가 중심적 정체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전면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족과 통일의 담론이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과 결합되어 공존하였다면, '두 국가론' 이후에는 그 가운데 민족과 통일의 요소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고 국가·주권·영토·안보·체제수호를 정체성의 중심으로 더욱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은 기존 정체성 구조 속에 이미 강하게 존재했던 국가 중심적 요소를 민족·통일담론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면화·제도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3) '두 국가론'과 국가정체성 재구성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보다 장기적인 정치적 프로젝트인지에 있다. 앞 장에서는 북한이 기존의 '하나의 민족을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남한과 구별되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국가적 자기정의를 전환하고 있다는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주민 수준의 인식에서도 일정하게 확인되는가, 다시 말해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독자적 국가성의 강조,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장기적 지속 가

능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91.6%는 북한이 '민족 중심 국가'에서 '국가 중심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93.9%는 최근 북한이 '우리 민족'보다 '우리 국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4.4%는 북한이 남한과의 민족적 연대보다 독자적인 국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한 대남정책의 조정이나 정치적 수사의 변화로만 인식하지 않고, 북한이라는 국가를 규정하는 중심 기준이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민족'보다 '우리 국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응답이 93.9%에 달한다는 사실은 최근 북한의 정치담론에서 나타나는 민족·통일담론의 약화와 국가·주권 중심 담론의 강화가 국가정체성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표 4> 두 국가론의 국가정체성 재구성(문항 31-35)

문항	동의율
국가 중심 국가로 변화	91.6%
우리 국가 강조	93.9%
독자적 국가성 강조	94.4%
주민의 국가 정체성 변화	88.8%
장기적 국가정체성 재구성	88.7%

※ '독자적 국가성 강조'의 동의율이 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로 생각됨. 즉 응답자들은 북한이 민족을 버리고 국가를 선택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동의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88.8%는 '두 국가론'이 북한 주민들의 국가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88.7%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정체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두 국가론'을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대남전략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국가인식과 정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장기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정책적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국가적 소속과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국가정체성 재구성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구성주의적 국가정체성 논의와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국가정체성은 고정되어 있거나 선험적으로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담론, 제도 및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정치적 산물로 이해된다. 특히 Campbell (1998)의 논의에 따르면 국가는 외부의 위험과 타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구별되는 자기(Self)의 경계와 정체성을 동시에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을 더 이상 동일한 민족이나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대국'으로 재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남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남한을 새로운 타자로 구성하는 과정은 동시에 북한 스스로를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국가'가 아니라 남한과 구별되는 독립된 주권국가이자 핵보유 국가로 새롭게 정의하는 자기정체성의 재구성 과정과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의 결과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

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결과가 현재 북한 주민 전체의 실제 정체성이 이미 변화하였음을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 조사가 탈북민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방법론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엄밀하게는 탈북민 응답자들이 '두 국가론'을 북한 국가의 자기정의(self-definition)와 국가정체성을 장기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변화(Campbell, 1998)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90% 안팎의 높은 응답이 여러 관련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은 '두 국가론'을 단순한 민족담론의 수정이나 대남정책의 변화보다 '민족 중심의 자기정의 → 국가 중심의 자기정의'로 이동하려는 국가재정의(state redefinition) 프로젝트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향후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정치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조적 변화 가운데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정체성 재구성과 체제정당성

국가정체성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과 연결되는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통일과 민족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해 온 기존의 국가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국가·주권·영토·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체제정당성의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통일이 오랫동안 북한 체제의 역사적 사명이자 중요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담론의 약화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당성의 구축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들이 '두 국가론'의 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 국가정체성의 재구성과 체제정당성의 재구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체제안정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92.0%는 '두 국가론'이 체제안정을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였으며, 92.5%는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91.1%는 대남 적대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93.9%는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92.5%는 국가 중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모든 관련 문항에서 90%를 상회하는 높은 동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응답자들이 '두 국가론'을 단순한 외교노선이나 대남정책의 수정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체제안정과 정치적 결속, 국가정체성 및 체제정당성의 재구성과 연결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두 국가론의 정치적 목적(문항 26-30)

문항	동의율
체제안정	92.0%
내부결속	92.5%
대남 적대정책 정당화	91.1%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강화	93.9%
국가 중심의 국가정체성 강화	92.5%

※ 모든 문항에서의 동의율이 91.1-93.9%라는 것은 탈북민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는 의미. 즉, 응답자들은 두 국가론을 체제관리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응답이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두 국가론'을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적 전략에 한정하지 않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의 통치 기반과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적 정치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통일

담론이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 국가'라는 역사적 사명을 통해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면, '두 국가론'은 이러한 정당성의 기반을 국가안보와 체제수호, 핵억제력과 국가생존이라는 새로운 논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체제정당성의 중심을 '통일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수호하는 국가'로 이동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체제가 기존의 정당성 자원이 약화될 경우 새로운 정당성의 근거를 구성하고 제도화하려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민족통일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제정당성의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이를 대신하여 핵보유국의 지위, 국가안보와 국가생존,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반미담론, 그리고 김정은의 영도와 강국건설 등을 새로운 정당성의 자원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국가론'은 남한을 적대국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외부의 위협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체제를 보호하는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관련된 모든 문항에 90% 이상의 높은 동의가 나타난 것은 적어도 조사대상 탈북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전환의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점에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과 체제정당성의 재구성은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민족과 통일 중심의 정체성에서 국가·주권·영토·안보 중심의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기정의를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국가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호하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체제정당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남한의 적대적 타자화 → 국가 중심 정체성의 강화 → 국가안보와 체제생존의 강조 →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강화'라는 정치적 연결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이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정당성을 구축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핵심적인 정치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통일인식 변화와 정책적 함의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통일을 국가의 핵심적인 역사적 과업이자 주민들이 지향해야 할 집단적 목표로 제시해 왔으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러한 통일담론의 기본 전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의 중심이 민족과 통일에서 국가와 체제생존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통일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두 국가론'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통일이 여전히 규범적 가치로 유지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과 현재의 생활안정 가운데 무엇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규범적 지지와 현실적 기대 사이의 특징적인 이중성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87.9%는 통일이 여전히 중요한 목표라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규범적 지향이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2%로 통일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93.0%가 "남북은 언젠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도,

80.4%는 “통일보다 현재의 생활안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은 단순히 ‘통일 의식이 강하다/약하다’로 설명하기보다는, 통일의 규범적 당위성은 매우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으나, 현실생활에서는 생존과 생활안정을 우선하는 이중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본 논문의 ‘두 국가론에 따른 국가정체성 재구성’ 논지를 상당히 흥미롭게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기존 민족·통일 정체성이 생각보다 매우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93% 수준의 ‘하나의 국가’ 인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 중심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훨씬 어려운 정체성 전환 프로젝트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북한 주민들의 통일관(문항 16-20)

문항	매우 동의	동의	동의율 합계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생각	44.9%	31.3%	76.2%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로 생각	57.0%	30.8%	87.9%
남북은 언젠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61.7%	31.3%	93.0%
통일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관심사	53.7%	28.5%	82.2%
통일보다 현재의 생활 안정이 더 중요	49.1%	31.3%	80.4%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인식이 통일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통일의 규범적 가치’와 ‘통일의 현실적 가능성 및 우선순위’가 점차 분리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통일은 오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역사적·규범적 가치로서 상당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과 국가의 현실적 조건에서는 체제생존과 경제적 안정이 보다 우선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구조는 ‘두 국가론’이 단기간에 기존의 통일의식을 완전히 소멸시키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통일의 현실적 필요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가정체성은 정치지도부의 선언이나 공식담론의 변화만으로 단기간에 재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자기인식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사회화와 교육, 제도적 변화, 주민들의 현실적 경험, 그리고 세대교체 등이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국가론’ 역시 현재의 성인세대가 기존의 민족·통일정체성을 즉각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장기간의 정치사회화와 세대교체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전제로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경험하게 될 향후 세대에서는 ‘하나의 민족-하나의 통일’이라는 기존의 정체성보다 북한이라는 독립된 국가에 대한 소속과 충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더욱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인식의 변화는 국가정체성 재구성과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다시 강화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통일의 규범적 중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와 ‘통일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 및 생활안정의 우선’이라는 이중성은 바로 이러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은 주민들의 통일의식을 단기간에 제거하는 정책이라기보다, 민족·통일 중심 담론의 정책적 비중을 축소하고 국가·주권·안보·생존 중심의 국가주의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존의 통일담론을 대체하려는 정체성 재구성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민족·통일 중심의 정치

사회화 → 통일의 규범적 가치와 현실적 기대의 분리 → 국가생존과 생활안정의 우선 → 국가 중심 정체성의 강화 →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의 정착'이라는 장기적 변화의 가능성이 '두 국가론'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함의라고 할 수 있다.

6) 종합분석: 국가정체성 재구성 가설의 경험적 검증

본 연구가 앞 장에서 제시한 연구 프레임은 국제환경 및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 →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전략적 적응 →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 체제정당성의 재구성 및 강화라는 일련의 인과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Campbell, 1998). 이에 본장의 탈북민 실태조사는 북한의 공식담론과 제도변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변화가 주민 수준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서 설정한 연구 프레임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라기보다 기존의 민족·통일 중심 담론을 재조정하고 국가 중심의 정체성과 새로운 체제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정치적 전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제시한 국가정체성 재구성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사 결과는 북한의 기존 민족담론이 국가와 분리된 독립적인 정치이념으로 작동하였다기보다 국가와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교육받았다는 응답과 조국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인식하였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민족·통일정체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국가이익의 우선성, 사회주의 체제수호의 중요성 및 북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약 90% 이상의 더욱 높은 동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반드시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과 통일의 담론이 궁극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와 체제에 대한 정치적 충성으로 연결되는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근의 '두 국가론'은 전혀 새로운 국가주의를 창출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존의 정체성 구조에 내재되어 있던 국가 중심적 요소를 보다 전면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태조사는 응답자들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91.6%는 북한이 '민족 중심 국가'에서 '국가 중심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93.9%는 '우리 민족'보다 '우리 국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4.4%는 남한과의 민족적 연대보다 북한의 독자적인 국가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국가론'이 단순히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정책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를 정의하는 중심 기준을 민족과 통일에서 국가·주권·영토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국가적 자기정의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88% 이상의 높은 동의가 나타났다는 점은 조사대상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일시적인 대남전략보다 장기적인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셋째,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은 체제정당성의 재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두 국가론'을 체제안정(92.0%), 내부결속 강화(92.5%), 대남 적대정책의 정당화(91.1%),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강화(93.9%), 국가 중심 정체성의 강화(92.5%)와 연결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기존의 민족과 통일 중심 정체성을 약화시

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새로운 국가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국가안보·체제생존·핵억제력 및 김정은의 영도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정당성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통일을 수행하는 국가'라는 기존의 역사적 사명이 약화되는 자리를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수호하는 국가'라는 새로운 정당성의 논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과 체제정당성의 재구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국가가 생산하는 새로운 공식적 정체성과 주민들이 실제로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새로운 국가담론에 대해 주민들이 내면적으로는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순응하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국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헌법과 제도, 교육 및 정치담론을 통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정체성이 주민들의 인식에서 즉각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에 의한 정체성의 생산과 주민에 의한 정체성의 수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이론적 전제를 뒷받침하며,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을 국가담론의 변화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민들의 수용·순응·저항이라는 사회적 과정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섯째,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변화라기보다 장기적인 정치사회화와 제도화, 그리고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민족·통일정체성은 수십 년에 걸친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중심 정체성이 단기간에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국가론'이 헌법과 법률, 교육, 선전, 정치담론 및 국가의례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새로운 세대가 이러한 환경에서 정치사회화될 경우 국가 중심 정체성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국가론'의 정치적 효과는 현재 세대의 즉각적인 정체성 변화보다는 향후 세대교체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정체성 재구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전환 → 국가 중심 정체성의 강화 → 새로운 체제정당성의 구축 → 주민에 대한 정치사회화 → 장기적인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북한 사회에서 민족정체성과 함께 이미 강한 국가 중심적 층성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두 국가론'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일시적인 대남정책이나 외교전략의 수정에 한정되기보다, 북한이 스스로를 어떠한 국가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자기정의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과 체제정당성 및 주민의 정치적 소속을 장기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국가 재편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보다 부합한다. 다만 탈북민 실태조사의 방법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현재 북한 주민 전체의 정체성이 이미 변화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기보다, 본 연구가 제시한 국가정체성 재구성 가설과 일관되는 강한 경험적 정황과 인식적 근거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엄밀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의 변화로 이해하는 기존의 접근을 넘어,

국가정체성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두 국가론'이 등장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과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목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북한의 국가정체성 변화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연결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주민 수준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변화라는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략, 국가정체성, 체제정당성 및 정치사회화가 상호 연계되는 보다 구조적인 정치적 변화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문헌과 정치담론에 대한 분석과 함께 탈북민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공식문헌과 담론분석을 통해서는 북한 국가가 어떠한 새로운 국가관과 정체성을 생산하고 제도화하려 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탈북민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주민 수준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정치담론과 제도를 통해 생산하는 공식적 정체성과 주민들이 정치사회화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체성의 생산과 수용을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연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대남정책의 수정이라기보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과 '조국통일'을 국가적 자기정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민족·통일 중심의 자기정의를 축소하는 대신 국가·주권·영토·안보를 강조하면서 남한과 구별되는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핵무력의 확보와 핵보유국으로서의 자기인식은 통일을 국가생존의 필수적인 전략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독립된 국가로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하나의 민족을 대표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라는 기존의 자기정의에서 '독립된 주권국가이자 핵보유 국가'라는 새로운 국가정체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북한의 기존 민족담론이 국가와 체제로부터 독립된 정치이념으로 작동하였다기보다 국가와 체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조사에서 남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교육받았다는 응답과 조국통일을 역사적 과업으로 인식하였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 사회에서 민족·통일담론이 주민들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이익의 우선성, 사회주의 체제수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동의가 나타났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과 통일의 담론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최근의 '두 국가론'은 전혀 새로운 국가주의를 갑작스럽게 만들어내는 정책이라기보다 기존의 정체성 구조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국가 중심적 요소를 전면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장기적인 정치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91.6%는 북한이 '민족 중심 국가'에서 '국가 중심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93.9%는 최근 북한이 '우리 민족'보다 '우리 국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94.4%는 남한과의 민족적 연대보다 독자적인 국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두 국가론'을 단순한 대남정책이나 외교노선의 수정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기인식과 국가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태조사의 결과는 '두 국가론'이 민족 중심의 자기정의에서 국가 중심의 자기정의로 이동하는 국가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이라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가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정체성의 재구성은 체제정당성의 재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두 국가론'을 체제안정과 내부결속, 대남 적대정책의 정당화, 국가 중심 정체성의 강화,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이 민족과 통일이라는 기존의 정당성 자원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핵보유국, 국가안보, 체제생존, 국가주의, 애국주의 및 김정은의 영도 등을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체제정당성은 점차 '통일을 수행하는 국가'라는 역사적 사명에서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수호하는 국가'라는 정치적 사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과 체제정당성의 재구성은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하나의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가 새로운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정체성이 즉각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국가담론에 대해 내면적으로는 일정한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국가가 생산하는 공식적 정체성과 주민들이 실제로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사회적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민족·통일정체성이 장기간의 교육과 정치사회화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가 중심 정체성이 이를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정체성 재구성은 정책 선언이나 헌법 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사회화와 제도화, 주민들의 현실적 경험 및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국가정체성 재구성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있다. 기존 연구에서 '두 국가론'은 주로 대남정책이나 대외전략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북한이 왜 오랫동안 유지해 온 민족과 통일담론을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국가 중심 담론을 구축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 정치체제의 장기적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분석 수준으로 확장함으로써 '두 국가론'을 북한의 정책 변화뿐 아니라 국가의 자기정의가 변화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David Campbell과 Iver B. Neumann의 국가정체성과 타자화에 관한 논의를 활용하였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정체성은 고정되어 있거나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타자의 관계, 정치담론과 제도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을 동일한 민족이나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대적인 별개의 국가, 즉 '항구적인 타자'로 재구성하는 것은 동시에 북한 스스로를 남한과 구별되는 독립된 국가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남한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국가'라는 자기인식을 약화시키고 '독립된 주권국가이자 핵보유 국가'라는 새로운 자기(Self)를 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정체

성의 재구성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체제정당성을 구축하는 정치적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향후 북한정치 연구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남정책의 변화에 한정하기보다 국가전략·국가정체성·체제정당성·정치사회화를 포괄하는 '국가 재편'의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최근 변화는 단순히 '통일을 포기하였는가'라는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기존의 통일과 민족담론을 약화시키면서 어떠한 새로운 국가적 목표와 정당성의 원리를 구축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무력과 핵보유국 정체성,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국가안보와 체제생존, 교육과 정치사회화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국가정체성 변화는 단기간에 완성되기보다 장기적인 정치사회화와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민족·통일 담론을 통해 정치사회화된 세대와 '두 국가론' 이후 국가·주권·영토 중심의 새로운 정치사회화를 경험하는 세대 사이에는 남한에 대한 인식,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 및 통일관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정치 연구에서는 '두 국가론'의 공식화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언론과 선전, 법제도 및 일상적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세대교체와 결합하여 주민들의 민족인식과 통일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북한의 장기적인 국가정체성 변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혜석(2024), 신냉전과 한반도 적대의 시대: '적대적 두 국가론' vs. '8.15 통일독트린', 한국과 국제정치, 40(4), 35-66.

고유환(2025),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통일정책연구, 34(2), 1-30.

구갑우(2024),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 9-53.

권숙도(2024),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대한정치학회보, 32(4), 127-150.

김규범(2026),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분석: 김정은 3기 대외전략 노선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 이슈브리프, No.830, 1-7.

김연철(2026),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평화공존론': 차이와 접점, 현대북한연구, 29(2), 174-207.

김창환(2025), 전망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국방연구, 68(3), 165-196.

박형중(2026),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기국면, EAI, 6월호, 3-5.

유영식(2019), 북한 '국가주의' 탐색: 우리 국가제일주의, 장신논단, 제51권 제5호, 355-380.

이중구(2024).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정책연구. 33(1), 29-54.

이중구(2026).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구성과 선포 요인: 국가제일주의와 대남적대론의 결합. 현대북한연구, 29(1), 164-203.

이효원(2026), 김정은 시대 북한의 헌법정치: 2026년 헌법에 나타난 적대적 두 국가론, 핵무력 지휘체계와 국가수반 중심의 권력구조, 통일과 법률, 제67호, 159-198.

임수진(2026),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북한의 자기재현 전략: '민족'과 '평화·공존' 담론의 변형과 효과. 아시아리뷰, 16(1), 105-132.

전영선·도지인(2026). '적대적 두 국가'론의 문화적 실천: 영화 <72시간>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51(2), 42-77.

정대진(2024),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통일과 평화, 16(2), 127-167.

정수희·민경태(2025),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공식화와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 민족공동체 지향에서 국가정체성 강화로, 인문과학연구, 제41호, 169-201.
정영철(2024), 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16(1), 7-47.
조성렬(2026), 두 국가론, 통일을 다시 생각한다, 철학과 현실, 제143호, 1-13.
황수환·장철운·홍철기(2024),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Campbell, David. (1998),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Edi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Neumann, Iver B. (1999), *Uses of the Other: “The East” in European Identity Form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정은, 2023년 12월 8기 9차 전원회의 보고,「조선중앙통신」. 2023.12.28..
김정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조선중앙통신」. 2024.1.16.
김정은,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노동신문」. 2026.3.24.

투고일자: 2026. 8. 31.
심사일자: 2026. 9. 29.
게재확정일자: 2026. 9. 30.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172～197.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172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Two-State Theory' and the Reconstruction of State Identity

Ji young Lee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hostile two-state theory" not merely as a shift in inter-Korean policy or unification strategy, but as a political process of reconstructing state identity. Drawing on constructivist theories of state identity and othering, the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framing of South Korea as a "permanent Other" simultaneously reconstructs of its own identity. This study combines an analysis of official documents and political discourse with a survey of 214 North Korean defectors conducted between March and June 2026 to examine both the production of official identity and its possible reception at the societal lev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thnic, national, and unification-oriented identities historically coexisted with strong political loyalty to the North Korean state and regime. At the same time, 91.6 percent of respondents perceived North Korea as shifting from a "nation-centered state" toward a "state-centered state," while 93.9 percent believed that "our state" is increasingly emphasized over "our 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hostile two-state theory may constitute a broader process of state reconfiguration, encompassing the strengthening of state-centered identity, the reconstruction of regime legitimacy, and long-term political socialization. However, such a change is likely to proceed graduall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political socialization, and generational change.

Key words: Hostile Two-State Theory, State Identity, Othering, Regime Legitimacy, North Korean Defectors